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통해본 학문의 자유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올 여름의 유난했던 무더위보다도 더 짜증스런 공안정국 속에서 일어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과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공안정국의 회오리가 가라앉는 가을에 들면서 사건 자체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오늘날 대학의 위상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리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문의 자유’는 수량화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사회의 다른 부분의 발전

에 비해 아직 저급한 수준이라는 데 크게 의의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근대 학문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해방이 분단으로 귀결되고, 냉전이데올로기가 남북한을 지배함으로써 한국현대사의 비극의 단초가 열렸다. 양극화된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으로 고착되어 이데올로기적 지형이 불구화되었다. 군사독재정권은 획일적 사고방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시켰으며, 급기야 유신체제는 전체주의적인 사상통제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의 자유’는 선구자의 외침이었을 뿐 현실에 뿌리를 내리기는 극히 어려웠다.

그러나 유신체제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할 무렵, ‘학문의 자유’는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의 민중사학, 민중사회학, 민중문학, 민중예술 등의 출현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서구의 근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는 민중의 운동을 그 담보로 하여 쟁취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광주학살을 대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자유’를 향한 민중과 지식인의 정향을 꺾을 수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실정법이 정한 굴레를 몸으로 돌파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학문의 자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과 지식인들이 항쟁의 전면에서 섰던 만큼, ‘학문의 자유’는 거진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의 자율화 프로그램이 각 대학에서 추진되고,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6월 항쟁은 완결되지 못하고 노태우 정권으로 어정쩡하게 타협됨으로써 ‘학문의 자유’도 법적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말았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필화사건을 예비하고 있었고, ‘서판포 교수 사건’이나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은 그 실례였다.

‘문민정부’에게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사회의 발전에 걸맞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당면한 과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문민정부하의 공안당국은 대학에서 5년 전부터 강의교재로 써 온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사법적 대응으로 응대했다. 역사는 가끔 거꾸로 가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과와 사건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대응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사건에는 공안당국, 언론기관, 대학당국 등 여러 행위자들이 제 나름

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학문의 자유’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와 책에 대한 스케치가 필요할 것 같다.

2. 강의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5년 전부터 경상대학교에서 개설된 강의 ‘한국사회의 이해’의 소산이다. 우선 이 강의부터 소개하고 싶다. 보통의 강의와 좀 색다른 이 교양강의는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항쟁 이후 대학사회도 자율화와 민주화의 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과거 군사정부의 국책과목이었던 교련과 체육이 교양필수 과목에서 폐지되고 교과목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지방대학의 척박한 대학문화 풍토를 조금이라도 살찌우는 데 기여하고자 1988년 봄부터 뜻있는 교수들이 모임을 가지고, 정식 교과과정 밖에서 매주 한 차례씩 학생들에게 ‘목요 교양강좌’를 제공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제들을 묶고 빠진 부분을 보태어 체계를 잡아 몇 강좌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대학당국에 정식 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고, 학생들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1989학년도 1학기에 경상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간의 사회과학계의 성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양교과목들이 다수 개설되었다. ‘법과 사회’,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 ‘여성과 사회’,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등이 그들인데, 이러한 강의들

은 교수들의 강의욕을 북돋웠으며 학생들의 학습욕을 진작시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 중 하나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이었다.

이 강좌는 한국사회 모순구조의 과학적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과제 아래 다수의 강사가 참여하는 공동강의로 기획되었다. 이 강의에는 사회학, 경제학, 국제경제학, 역사학, 법학 등을 각각 전공으로 하는 10명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이하면서도 유기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들을 체계를 잡아 매주 한 차례씩 번갈아 강의하였다. 첫 학기에는 매시간 강의노트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면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어서 시급히 교재를 출판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강의노트를 묶어 1990년 2월 교재로 처음 출판했고, 4년이 지난 올해 그간의 학문성과의 진전과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개정판인 94년판 『한국사회의 이해』를 출간했다. 이렇게 하여 나온 책이 공안당국의 심판 대상이 된 것이다.

3.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이 책은 서설과 한국 근현대사, 사회구조, 사회운동을 다루는 3부,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사회의 현실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사회과학은 현실과학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우리는 비판적 시각에서 정치, 경제, 노동, 농업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 온 한국 사회과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 요약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데 집필의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우리가 이 책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한 시각은 제1장 서설에서 분명히 쓴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피지배자인 노동자계급 또는 민중의 입장에서 서서 한국사회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입장의 문제는 고전적 질문의 하나이다. 우리는 “입장의 올바름은 사회과학의 출발이다”는 전제 위에서 중립적 입장의 허구를 비판하고, 솔직하게 '편향된' 입장에 서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토론을 위해 정당한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사회과학계 내부에서 반론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반론이나 비판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번과 같이 공안당국에서 매도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언론을 동원한 힘의 논리였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생산적인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과학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가 기본적으로 계급적 대립에 기초한 사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회를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를 낳았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과학의 역사를 강단 사회과학(부르주아 사회과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분열은 과학의 내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가 존속하는 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 요컨대 민중적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가장 큰 빛을

지고 있다.(사실은 이 점이 공안당국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엉뚱하게도 우리 책을 주체사상파라고 몰아붙였지만, 우리 책의 어디에서도 주체사상과 상통하는 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시종일관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련과 동구권에서 교조화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사회과학 방법을 한국사회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지상에서 인용되었던 “최근에는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오류에 있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 또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보는 것은 더욱 순진한 생각이다.”(『한국사회의 이해』, 25쪽)라고 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쓴 것이었다.

사실 마르크스의 사회과학 방법은 그의 이름을 자처한 교조화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과학계에서조차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강단 사회과학에도 이미 깊숙이 배어 들어 있는 마르크스의 학문적 기여도 그 이름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다. 몇 년 전까지도 마르크스주의는 ‘비판을 위해서만’ 공식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하는 수 없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지식욕을 채웠고, 때로는 노예언어로 그것을 학습하였다. 해방후 사회과학에 대한 반공이데올로기의 폐해는 그만큼 컸던 것이다.

80년대의 사회운동, 특히 지식인 운동은 그 벽을 허물고, 지하가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논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동력

이었다. 우리가 강의교재로 쓴 이 책의 서설에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을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한국 지성사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최인석 판사도 구속영장 기각이유서에서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이거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은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를 보는 시각 내지 방법”(32쪽)이라고 보고 그 요체를 역사적 방법, 구조적 방법, 실천적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현대사, 사회구조, 사회운동을 각각 다루는 3부로 책을 구성하여 한국사회를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이러한 교양교재는 지난 날 대학 교양교육에서 외국의 학설을 소개하거나 추상적인 이론을 열거하는 방식과는 대단히 다르다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한 교양교육이 과거의 그것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 감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교양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이 강의의 수강생은 한 해에 평균 1,500명에 이른다.) 우리는 사회과학이 한국의 현실과 모순과 대결해야 하며, 그리하여 한국적 사회과학을 토착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현실에 대한 팽팽한 긴장을 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현실과의 긴장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4.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진실되게 가르치려 한 우리의 노력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법률에 의해 '이적표현물'이란 혐의를 받고, 8월 3일 저녁부터 마스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우리 책의 어떤 부분이 거두절미되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있었으며, 우리가 마치 주체사상을 옹호하여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되었다. 다시 유신시대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언론재판을 당한 것이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에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즉각 성명서를 준비하고 다음날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교재로 강의하고 있는 9명 집필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와 학문, 그리고 대학의 연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소환에 불응할 것임을 밝혔다. 다행히 경향의 기자들이 많이 모이고 일반 청중이 대형 강의실을 꽉 메운 데서 2시간여에 걸친 진지한 회견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검찰당국과 언론의 공세에 대해 학계와 지식인 단체들에서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이 과거와는 달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량이 성장한 것이리라.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그 날 경상대 사회대교수회, 한국산업사회연구회 등에서 성명서를 내어 검찰의 조치가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처리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민주당에서도 검찰의 조치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 날인 5일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립대교수협의회 회장단 모임, 사립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민족예술인 총연합,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9일에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한국사회의 이해』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집필자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 중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13일 경상대에서 보고대회 및 서명발대식을 갖고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수사를 철회하고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창원지검과 경남도경을 항의방문하였다. 이외에도 각 대학 민교협, 학술단체, 사회단체, 학생단체 등 70여 단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문 사상의 자유수호'라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검찰은 집필자들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언론을 통해 표명하면서 이번에는 강의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도 논설을 통해 책은 연구의 자유라는 점에서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되, 저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공안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

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상대학교 당국이 문제를 꼬아놓았다. 대학당국은 8월 3일 사건이 터진 후 열흘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 12일에는 “검찰에서 강의교재의 내용이 학문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최종판단은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해하기 힘든 성명서를 총장 명의로 발표하더니, 16일에는 대학 내의 폭넓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교과과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외부 강제에 의한 강의의 폐지는 교수의 지위를 잃는 것보다도 더한 형벌”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날 17일부터 대학당국의 폐강 결정에 항의하여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검찰의 2차, 3차 소환장 발부와 우리 집필자들의 ‘폐강철회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이 며칠간 팽팽히 맞서다가, 급기야 검찰은 공권력의 위신을 명분으로 24일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30일에는 장상환 교수와 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창호 교수 등 다섯 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저녁 텔레비전 화면에는 8월 3일 저녁 화면이 재탕되고, ‘대학과 나라를 걱정하는 한 교수’가 집필자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 앞으로 보낸 투서가 기자들에게 공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 최인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태는 급전되었다. 석방이 되어 나와서 들으니 1%의 확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사유서 중에서 눈이 유난히 가는 대목이 있었다.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 문제는 대학의 자율조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과 대학당국, 그리고 언론기관의 무리를 통렬하게 찌르는 판사가 있음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했다.

5. 사건의 행위자들

이번 사건을 통해 ‘학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연합한 중요한 행위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당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언론기관,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대학의 자율을 지켜야 할 대학당국이 었다. 이들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거나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각각 일조했다. 이들 행위자들이 보인 행태의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학문 사상의 자유’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검찰당국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물론 검찰당국이다. 우선 검찰이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쓰고 있는 책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학문적 활동에 대해 국가권력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당국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는 북한의 유일사상의 과오를 흉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물론 검찰이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학문의적인 힘으로 학문에 개입한 것이다.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정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왔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 정체가 다소 드러난 공안문제연구소

는 전문적 연구기관이라고 보기 힘들며, 연구원들도 아마추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써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분석의 수준도 천박하여 학문내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그것은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사상통제의 외곽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진 후 공보처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를 비판한 한승조 교수의 글을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에 배포한 것도 여론 조작을 위한 것이지 학문적 개입이라고 보기 힘들다.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한 사회에서 학자들의 전문성이나 대학의 존립 근거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각 영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며 자칫 근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이 사회를 정체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은 대학의 강의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토론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고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어떤 제한이 가해진다면, 창조적 지식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국가권력이 개입해 들어온 것이다.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수강생들 중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강의 내용과 시험문제 및 답안에 대해 수사를 강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 사제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교수권과 학습권에 대한 도전으로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러한 경찰 수사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를 폐강하도록 대학에 압력을 행사했다.

2) 언론기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소위 신공안정국에는 언론기관이 자발적으로 공헌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박홍 총장의 근거없고 무책임한 발언을 각 언론사에서 다투어 크게 보도하여 마치 우리 사회에 주사파가 난무하는 것처럼 조장한 것이 공안세력에게 무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된 테에는 언론 기업주의 정치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상업주의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안당국이 주관적으로는 언론기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언론기관은 공안당국의 의지를 미리 알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논평을 가함으로써 언론재판을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다. 사태의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이 오히려 사태를 왜곡하여 지배권력으로 행세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각 언론사는 검찰당국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된 책과 당사자들을 취재하여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애써 회피했다. 중앙일간지로서는 ‘한겨레신문’ 기자 이외에는 어떤 신문사 기자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태의 본질과 관련된 취재를 하러 온 적이 없었다.(내일신문, 한겨레 21, 시사저널, 뉴스메이커 등 주간지 기자들이 보인 심층취재 태도는 이와 대조적이었다.) 검찰의 소환장 발부 소식은 지겹게도 보도하면서, 전국 70여 개 단체에서 낸, 검찰의 조치를 비판

하는 성명서 중에 제목이라도 언급된 것은 몇 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혹 주변적인 문제로 전화를 해 올 때 질책을 하면, 기자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언론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3) 대학당국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학문 자유의 보루인 경상대학교 당국도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데 일조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던가. 경상대학교 당국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당국과 언론기관의 행위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방조하고, 급기야 폐강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이 지켜야 할 기본적 본분마저도 저버린 속사정에 대해 이 짧은 지면에 모두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을 알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경상대학교가 지방대학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역대 군사독재정권 아래 대학의 자율은 정권에 의해 유린되었고 지방대학은 그 정도가 심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 토착세력과의 전근대적인 인간관계망이 매우 조밀하다. 대학이 자율적 기능을 행사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들 중 일부는 그동안 대학의 개혁에 앞장서 왔고 지역 토착비리세력에 대한 비판을 과감히 해왔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답이 이번 사태에서 대학당국의 행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역시 대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5년 전에 출판되어 대학 강의교재로 사용되어 온 책을 공안당국이 문제삼음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군사정권에서도 문제시되지 않았던 책이 문민정부 시대에 문제가 되다니……"

한편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다른 한편으로 정권유지를 위해 수구세력과 연합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현 정권의 여러 정책들이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번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 대답은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집권 초기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현 정부는 1년 반이 지난 지금 40% 수준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 다수의 개혁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고 수구세력과의 결별 충고로 보아야 한다.

산적한 개혁과제에 비하면 사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손쉬운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사회개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

정진상/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한국사회의 이해』,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